

난민은 누구이고,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 용 승 (대구대학교/민족연구 편집주간)
(leeyongseung@daegu.ac.kr)

I. 그들 목소리

지금 제주도에는 549명의 예멘난민이 들어와 있고, 이들은 현재 난민지위 인정을 위한 기나긴 여정을 준비 중이다.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을 둘러싸고 논란이 크게 일었다. 절차가 있다면 어떻게든 난민지위 인정을 신청할 수 있고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들의 체류는 보장된다. 그것이 이미 있는 제도가 지시하는 절차이다. 이른바 준법이다. 그러나 제도와는 무관하게 논쟁은 날로 격화되었다. 제주도에는 이들의 체류와 인권을 옹호하는 단체(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와 반대하는 모임(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¹⁾이 만들어져 대립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찬반논란이 뜨거웠다. 난민법 폐지는 지금까지 진행된 청와대 청원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지금은 다소 냉각 상태에 접어들었으나 언제든 폭발 잠재력을 가진 이슈이다. 먼저 그들은 왜 난민이 되어 자신의 고향과 국가를 뒤로 하고, 낯선 나라의 문을 두드렸을까.¹⁾

한국의 난민법(2조)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 이 글은 대구정치포럼 초청 특강(2018. 8. 14.)에서 발표한 글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1) 아래에서는 언론에 기사화된 예멘 난민들의 인터뷰를 참조, 인용하였다. 참조 언론은 중앙일보(bit.ly/2P41dVG), 서울신문(bit.ly/2vBzzYg), 노동자연대(bit.ly/2P2N4be), 한겨레21(bit.ly/2vGfsIh / bit.ly/2vEdxnp) 등이다.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상주국)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제주에 입국한 예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난민 신청자는 위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받는다. 후세인과 나지, 하단은 예멘에서 탈출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후세인: 지금 예멘은 국민들이 살 수 없는 나라가 돼 버렸습니다. 민병대와 무장단체들이 활보하고, 약탈과 납치가 횡행합니다. 질병으로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광적인 학살이 만연합니다. 예멘 전역에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멘에서 탈출했습니다. 나지: 예멘에 남으면 다 죽을 것 같았다. 남아 있으면 싸우게 할 테고, 싸우기 싫다고 하면 죽일 테니까.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겠나? 우린... 안전하게 살고 싶어 찾아왔다. 하단: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었다. 미래를 꿈꿀 수 있었다. 지금은 도망칠 수밖에 없다. (고등)학생인데도 싸우기를 강요당했다.

내전 사유로 자국을 떠난 사람들에게 대해 난민 입국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난민법 상 예멘인은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은 것이 아니고, 종교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반군에 의한 징집이 정치적 견해에 따른 박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수 있겠다. 다만 내전이 4년째 진행 중이고, 연합군의 폭격으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탈출했다는 사실은 마땅히 고려되어야 한다. 하단은 “그냥 전쟁에서 도망쳤다가 아니다. 억지로 총을 들게 하고 따르지 않으면 죽이려고 하는 집단으로부터 도망쳤다가 맞다.”고 항변한다.

이번에 제주로 들어온 예멘인들은 말레이시아를 거쳐 5월까지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던 제주로 들어왔다. 와셀은 제주도로 입국한 경위를 설명한다. 이들이 제주도에 입국하는 과정에 들인 경비는 1,500-2,000 달러가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는 직업을 찾고 생명을 지키려고 말레이시아에 갔지만, 실패했다. 한국에 대해 알게 되고, 제주도에 비자 없이 갈 수 있다고 들었을 때, 제주도로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한국은 위대한 나라이고 인권 국가라고 들었다.

난민법상 취업은 입국 6개월 이후에 가능하지만 특수상황을 감안하여 제주도의 난민 신청자들은 취업이 허용되고 있다. 취업분야는 양식업, 어업, 요식업 등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제주도에 다른 산업분야가 거의 없기는 하다. 현재 제주도 예멘출신 난민 신청자들에게는 출도제한 조치가 내려진 상태이다. 그들의 출도가 허용되고 육지에 있는 예멘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자신들이 보다 잘할 수 있는 곳에 취업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과 난민지원 단체의 주장이다.

후세인: 우리가 섬 바깥의 다른 도시에서 살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허락해 주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아름답고 안전한긴 합니다. 하지만 일자리가 너무 없습니다.

이번 제주 난민 사태에서 반대가 많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대다수 무슬림이라는 사실이었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탈냉전 이후 무슬림은 테러와 폭력을 연상시키는 ‘무엇’이 되었다. 모하드와 나지는 이러한 한국 사람들의 우려에 대해 이슬람을 옹호하며 말한다.

모하드: 한국인들이 무슬림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건 알지만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우리도 싫어한다. 살라말리쿰은 ‘당신에게 평화가 깃들길’이란 뜻이다. 우리는 전쟁보다 평화를 원한다.

후세인: 만약에 이슬람이 테러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테러를 조장한다면 저는 이슬람을 떠날 겁니다. 저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럴 겁니다. 피를 흘리게 하는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나지: 잘못을 저지르는 무슬림은 극소수다.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는 건 부당하다... 그래도 난 노력하고, 노력하고, 노력할 거다. 한국의 규칙을 지키고, 옳은 걸 따르고, 긍정적인 모습만 보일 것이다. 그럼 언젠가는 ‘무슬림도 괜찮네’라고 말해 주지 않을까. 우린 절실하다.

일반적으로 무슬림은 이슬람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탄 테러나 폭력에 대해 부정적이다. PEW Research Center의 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와 이라크 무슬림의 90%이상, 미국 거주 무슬림 86%가 폭력행위는 거의 혹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응답한 바 있다(Lipka 2017). 극단주의에 따른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하기 어렵겠지만 이러한 행위의 원인을 모두 행위자에게 전가하는 것도 공정한 태도는 아니다. 일례로 팔레스타인들의 저항을 무슬림 극단주의 문제로 여기고, 그들만을 비난할 수 있을까?

한국에 들어온 예멘 난민 신청자들의 미래는 한국의 태도에 상당 부분이 달려있다. 달린 것이 누구에게는 목숨이 될 수도 있다. 지금은 지옥 같은 조국을 도망쳐 나왔지만 그들은 전쟁이 종식되고 자국의 상황이 안정되면 돌아가겠다고 말한다. 적어도 본국으로 귀환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돌아가기 위해 떠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알하라지: 한국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다. 예멘으로 돌아가면 전쟁에 내몰려 죽을 텐데 나는 죽고 싶지 않다. 최근에는 내전 상황이 악화돼 예멘 국경이 폐쇄됐다. 돌아갈 방법도 없다.
모하드: 예멘 상황이 안정되면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한국에 머물고 싶다. 우리를 받아 준, 도와준 모든 한국인들에게 고맙다.
와셀: 내전이 끝나 다시 예멘으로 돌아가 가족을 만나고 싶다. 그전까지 한국인들에게 무슬림 이미지를 좋게 만들려고 한다.

그들이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 영구 정착할지는 전망하기 어렵다. 다만 서구의 사례에서 보았을 때, 정착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면 많은 경우 정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로서 전망해 볼 수 있는 정도는 난민 신청자는 본국 상황을 고려하고, 자신의 이익을 가늠하여 더 이득이 큰 쪽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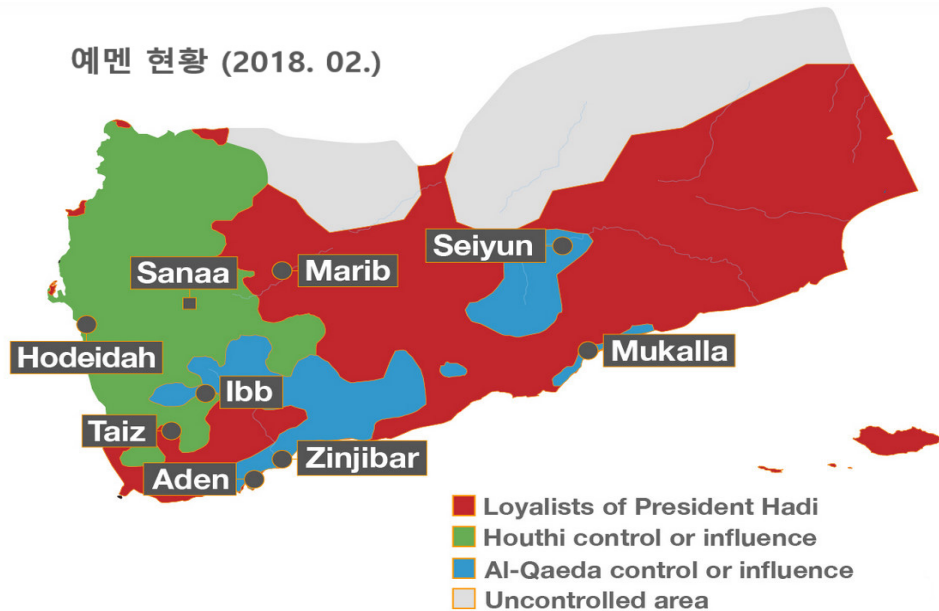
II. 예멘은 지금

예멘은 현재 내전중이다. 예멘은 2011년 ‘아랍의 봄’ 당시 33년간 집권한 살레(Ali Abdullah Saleh) 대통령 축출에 성공하였다. 이어 하디(Abd Rabbu Mansour Hadi)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가 수립되었으나 정국 불안은 수습하지 못하고 결국 내전이 발발했다. 살레 전 대통령과 손을 잡은 후티(Houthi) 반군은 2014년 9월 수도 사나(Sanaa)를 점령하였고, 2015년 하디의 요청을 받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공습을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내전이 지속되고 있다. 예멘 내전은 형식상 하디의 합법 정부와 반군 간의 내전이지만, 미, 영, 프 등 서방의 지원을 받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주축의 연합군(수니파)이 개입한 국제전이다(박현도 2018).²⁾ 후티 반군은 “연이은 폭격에 시달리면서도 중앙은행, 국경수비대, 법원, 대학 등 국가에 준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로랑 본푸아 2016)고 한다. 국제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예멘 상황의 빠른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하는 이유이다.

예멘 내전의 근원을 따져 올라가면 어김없이 강대국에 의한 (식민)통치를 마주하게 된다. 실제 “전쟁 난민의 대부분을 만들어내는 지역들이 갖는 공통점은 서구에 의한 식민지배를 경험했다는 것이다.”(박경태 2016, 50) 수도 사나를 중심으로 한 지역은 1917년까지 오스만 제국이, 아덴(Aden) 중심의 남예멘은 1839년부터 1967년까지 영국이 통치하였다.

2) 출처: <http://bit.ly/2P7D3d2> (검색일: 2018. 08. 02.).

북예멘에는 1962년 군부 쿠데타로 ‘예멘아랍공화국’이 수립되었고,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남쪽에는 예멘 인민민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한반도, 독일과 같이 이념에 따른 분단국가였던 남북 예멘은 1990년 자본주의 북예멘의 주도로 통일되었으나 곧바로 내전이 발발했다. 구남예멘 지도부의 독립 선언으로 촉발된 94년 내전은 신속히 진압되었다. 그러나 내전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었다.



[그림 1] 예멘 통제 현황

출처: www.aljazeera.com (검색일: 2018. 08. 03.)

과거에는 이념이 주요 갈등 요인이었다면 현재는 종교가 분쟁 요인이다. 예멘은 전체 인구 가운데 수니파가 53%, 시아파가 47%이다. 북부는 시아파, 남부는 수니파가 장악하고 있다.³⁾ 후티 반군의 주요 세력인 시아파는 북예멘 지역에 집거한다. 후티 반군이 예멘의 정국을 주도할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남부로 불안정이 옮겨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동맹 미국은 예멘 내전에 깊이 개입하고 있다. 현재 이란 핵합의를 둘러싸고 날로 격화하고 있는 미-이란 분쟁을 고려해 볼 때 이란과 같은 종파인 시아파가 예멘을 장악하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꽤나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이다. 시아파가 득세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대중동 전략에 균열을 낼 수도 있다는 점이 미국이 깊숙이 발을 담그고

3) 출처: <http://kor.theasian.asia/archives/190918> (검색일: 2018. 08. 06.).

있는 이유이다. 종교 갈등에 더해 부족 갈등은 예멘의 분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근대국가 수립 이후에도 예멘의 부족주의는 전통적 구조 속에서 개인과 사회, 부족과 국가를 서로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사회 조직의 형태로서 유지되어 왔다.”(남옥정 2015, 37).

Ⅲ. 난민 현황 및 난민 정책

난민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으로는 1951년 채택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이 있다. 한국은 1992년 국회 비준을 통해 이 협약에 가입했다. 2012년에는 난민법도 제정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먼저 난민법을 제정하여, 난민인정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

2017년 12월 기준으로 총 난민신청자는 32,734명이며, 그 가운데 난민 인정은 799명, 인도적 체류 허가자는 1,491명이다. 난민인정 신청자수가 1,000명을 넘어서는 2011년 이후 추이는 아래 표와 같다.

[표 1] 난민 현황

년도	신청자수	인정	인정 율	불인정	
				인도적 체류	불인정
2011	1,011	42	4.15	21	277
2012	1,143	60	5.25	31	558
2013	1,574	57	3.62	6	523
2014	2,896	94	3.25	539	782
2015	5,711	105	1.84	194	1,835
2016	7,542	98	1.30	246	6,013
2017	9,942	121	1.22	318	5,607
계*	32,734	799	2.44	1,491	17,172

* 1994년부터 합산 총계

출처: 2018 난민인권센터 통계자료집

[표 2]는 2018년 기준 난민 신청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이다. 기준은 난민지원시설 비이용자이며, 시설 이용자는 50% 감액하여 지급한다. 생계비 지급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복지부가 고시하는 생계지원금액에 근거한다. 생계비는 최대 6개월간 지급하지만

실제 평균 지급 개월은 3개월이며, 이마저도 전체 신청 가능자 가운데 극소수(2017년 기준 3%)만 혜택을 본다(난민인권센터 2017, 49). 생계비 지원 외에 정부는 난민인정 신청자에게 주거시설, 의료,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표 2] 2018년 생계비 지원액(법무부고시 제2017-254호)

가구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금액(원/월)	432,900	737,200	953,900	1,170,400	1,386,900

자신이 난민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해당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에 근거하여 심사가 진행된다. 난민인정 심사과정에서 주요 심사 사항은 “난민신청자의 구체적 신분, 박해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우려되는 박해가 신청인의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과 인과 관계(causal link)가 있는지 여부이다.”(박영아 2015, 11-12). 난민은 긴급하게 대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 심사 항목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많은 경우 난민 심사는 난민 신청자의 신뢰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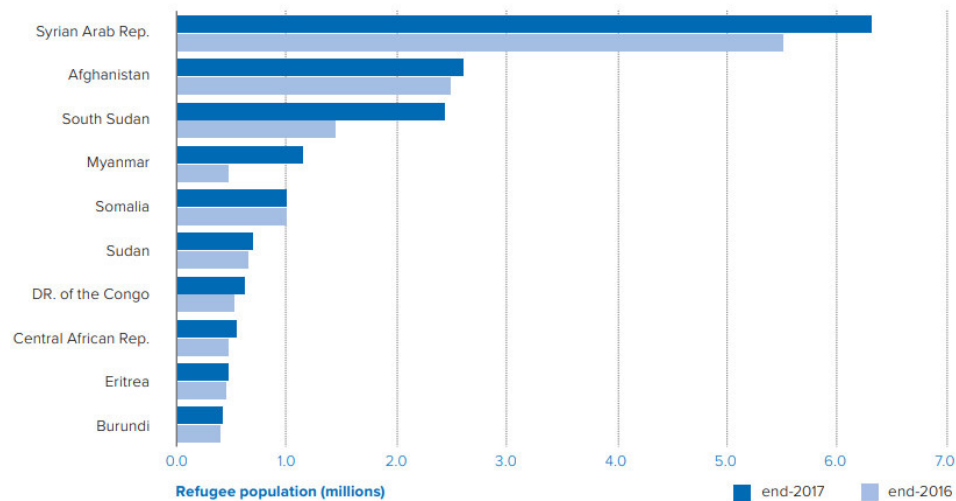
난민법에 규정된 절차만으로 한국의 난민인정 과정이 엄격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현재까지 한국의 난민인정 비율은 2.4%(보호율은 7%)⁴⁾로서 세계 평균(30%)과 비교하여 턱없이 낮다는 점에서 한국의 절차가 대단히 까다롭다는 점은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2017년 기준 심사대기자가 9,775명임에 비해 심사 담당 공무원은 37명에 불과하다(난민인권센터 2017, 28). 단순계산으로 한 해 일인당 담당해야 하는 심사인원이 260명이 넘는다. 한국이 난민지위 인정에 대단히 소극적인 이유는 왜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관료제에 기인하는 통제와 규제 관점이 우세하다보니, 난민 신청자를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기보다는 ‘잠재적 거짓말쟁이’로 간주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법을 집행하고 위반자를 단속하는 것이 전속 업무인 법무부가 난민심사를 담당한 당연한 귀결이다. 덧붙여 난민에 비우호적인 국내 여론도 정부 당국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일 것이다.⁵⁾

UNHCR(유엔 난민문제 고등 판무관)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박해나 분쟁, 일상적 폭력으로 강제 이주당한 사람들은 6,850만 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다수는 국내 강제 이주민(4,000만)이고, 난민은 팔레스타인 난민 540만 명 포함 1,990만 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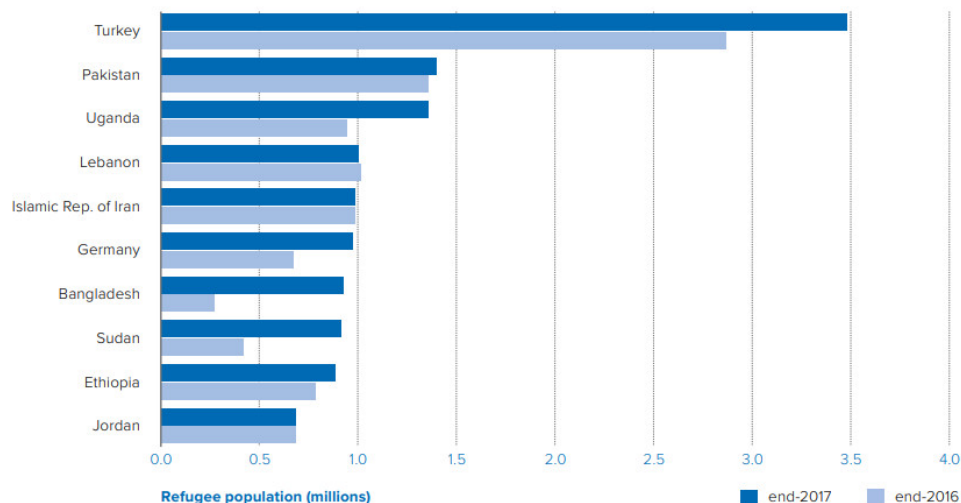
4) [표 1] 기준. 보호율은 난민인정을 받지 못했으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 수치이다.

5) 저개발 국가(less developed countries)에서 난민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야콥센(K. Jacobsen)에 따르면 정책 결정 과정은 일관된 합리성에 근거하기보다는 부처 간 권력 투쟁을 포함한 관료정치, 정보 부족, 관료적 관성 등의 복잡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난민의 85%(1,690만)는 개발도상국 출신이며, 시리아(630만), 아프가니스탄(260만), 남수단(240만), 미얀마(120만), 소말리아(98만) 출신이 전체 난민의 68%를 차지한다. 2017년 기준 난민 신청(asylum application)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는 미국(331,700명)이며 독일(198,300명), 이탈리아(126,500명), 터키(126,100)가 뒤를 잇고 있다. 현재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한 국가는 터키(350만)이다. 이어 파키스탄 140만 명, 우간다 140만 명, 레바논에 99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림 2] 난민의 주요 출신 국가. 출처: UNHCR(2017, 15)



[그림 3] 주요 난민 수용국. 출처: UNHCR(2017, 17)

IV. 특별히 혐오에 대하여

제주 난민 입국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에서 진행된 청원 운동은 71만 명이 서명하고, 이에 법무부 장관이 답변⁶⁾을 하면서 일단락되었다. 현 정부 들어서 수많은 청원이 진행되었지만 가장 많은 사람이 열성적으로 참여한 청원이 아닐까 싶다.⁷⁾ 이와 더불어 난민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은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난민 반대 의견이 절대 다수였다. 한국 정부가 다문화사회를 표방하면서 다문화정책을 시행한지 12년이나 지났다. 그러나 우리 안의 인종, 문화 다양성에 대한 관용도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노력이나 학계의 연구가 무색하리만치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이번 사건은 여실히 보여주었다. 대다수 논란은 자국민 보호 대 난민 보호 프레임이 동원하였다. 양자의 부당 대립은 자못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주에 집단적으로 입국한 예멘 사람들에게 대한 적대는 이슬람에 대한 편견 (Islamophobia)도 크게 작용했다. 이슬람은 기독교가 주도하는 세계에서 전쟁과 테러의 대명사가 된지 오래이다. 9.11테러나 알카에다에 의한 테러, 최근의 ISIS 등 이슬람을 표방하는 집단에 의한 테러와 폭력 행위는 이슬람의 극단성과 폭력성을 드러내는 사례로 거론된다. 2010년 기준 무슬림은 약 16억 명으로 기독교도 21억 6천만 명 다음으로 다수이다.⁸⁾ 기독교도보다 적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유럽의 무슬림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것과 맞물려 무슬림의 ‘범람’에 대한 다소 비현실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냈다.⁹⁾

이번 예멘 난민 신청자는 거의 무슬림이다. 그것도 남성이 대다수이다 보니 무슬림과 테러를 연결 짓는 편견과 무슬림의 증가 우려를 상상하게 하는 효과를 낳았다. 그렇지 않아도 여성이 안전한 사회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남성 무슬림의 집단 입국은 이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비합리적 상상력을 자극했다. 사실 무근임이 밝혀졌지만 제주에서 캠핑 중 실종된 여성이 난민 신청자의 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가짜 뉴스’가 유포되기도

6) 8월 1일 진행된 법무부 장관의 답변 요지는 허위 난민 신청자 색출 강화, 심사 인력 확충, 난민 심판원 설치, 심사기간 1년 이내 단축, 난민 브로커 처벌 등이었다. 필자가 보기에 이날 답변의 가장 문제적 대목은 “진정한 난민”과 “허위 난민”을 구분한 것이다.

7) 2018년 8월 12일 현재, 청와대 청원 답변이 완료된 46건 가운데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는 714,875명이 참여하여 가장 많은 사람이 참여했다. 조두순 출소 금지(615,354명), 병상연맹 엄중 처벌(614,127명) 청원이 그 뒤를 이었다. 출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answer> (검색일: 2018. 08. 02.).

8) 출처: <http://www.pewforum.org/2015/04/02/religious-projection-table/2010/number/all/> (검색일: 2018. 08. 12.).

9) Pew research center는 2060년 무슬림 인구가 기독교도를 능가해 전체 인구의 31.1%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출처: <https://pewrsr.ch/2vFH4gA> (검색일: 2018. 08. 12.). 같은 자료에 근거하여 Lipka(2017)는 금세기 내 무슬림은 최대 종교 집단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했다. 김나미(2018)는 이를 “여성인권”의 이름으로 맺는 ‘위험한 연대’라고 표현한다. 인종차별 의식은 여성의 안전을 걱정하는 수사 뒤로 가려진다. 사실 이들은 같은 아시안이지만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외모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가시성을 높이기 때문에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은 오히려 낮다. 그러나 통계가 상상을 교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근래 한국 사회에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만연하다. 혐오의 물줄기는 소수자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치가나 전통적 강자에게 향하기도 한다. 일상다반사로 벌어지는 반사회적 ‘혐오 놀이’에 대한 원인에 대한 얘기는 이 글의 한계와 필자의 능력을 벗어나기 때문에 차치하고, 소수자를 향하는 혐오에 대해서는 짚어볼 만하다. 타자에 대한 혐오는 ‘투사’(projection)인 경우가 많다.

보통의 경우 인간은 자기 내면의 부정적 모습 혹은 불안을 타인에게 투사하고 그것으로 타인을 미워하고 부정하는 이유로 삼는다.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드러날까 불안한 자기 내면의 어떤 특성을 외부로 투사하거나 타인에게서 그러한 모습을 굳이 찾아낸다. 두 번째 투사는 자신이 겪는, 자기가 도대체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사회구조의 부당함을 다른 소수자에게 곧바로 투영하는 것이다. 일종의 희생제의와 유사하다. 거대한 구조보다는 희생양을 찾아 구조에 대한 불만을 그들을 매개삼아 터뜨린다(이용승 2016).

이러한 투사는 주변의 소수자 혹은 약자에게 향한다. 나의 현재 약함이나 미래에 그렇게 될 가능성에 대해 싫어하는 감정은 내 주변 가까이 있는 약자에게 향한다. 가난이나 궁핍 혹은 ‘찌질함’이 혐오의 대상이 되는 이유이다. 두 번째 ‘희생제의’는 자신의 현재 불안한 처지나 그렇게 될 가능성에 대한 불만을 구조(체계) 내지는 그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강자에게 표출하기보다는 사회적 약자에게 돌리는 경우에 나타난다. 거대하고 두려운, 그렇지만 실체가 불분명한 적과 대면하기보다는 보다 손쉬운 상대를 찾아 혐오와 저주를 쏟아낸다. 불만은 넘치는데, 과녁은 흐릿하니 가까이 보이는 약자가 분노의 희생양이 된다. 박권일(2018)은 한국의 난민 혐오 분출에 대해 “좌절한 대중이 찾은 상상의 적”이라고 표현한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불안을 조장하거나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곳에서는 이 상황이 나쁘지 않고, 오히려 다행스레 여길지도 모를 일이다. 이주노동자, 난민을 향한 혐오도 이와 유사한 경로를 따른다. 그들은 우리사회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며, 그로 인해 우리 내면의 불안 심리를 자극한다. 또한 그들은 현재의 불안정 노동이나 실직 위협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렇게 보면 혐오는 두려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번 예멘 난민 사건에서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국민 안전’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난무한 것의 근원 감정은 두려움이다. 두려움의 원인은 보편성의 관점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보다 도드라진

감정에서 찾을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낯선 것을 꺼리고 익숙한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그 두려움을 즐길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피하고 싶어 한다. 이것이 낯선 이방인에 대해 느끼는 감정의 보편적 근원이다. 한국 상황이 낯는 두려움의 원인은 단일 민족 의식과 연계되어 있다. 확실하게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 예정되어 있거나 단속되면 추방할 수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달리 난민은 일단 일시 체류가 허용되고, 난민으로 인정받게 되면 영구 정착을 수용해야 한다. 현재까지 한국의 난민 인정률을 단순 적용하면 500여 명 가운데 최종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을 사람은 기껏해야 15명 내외지만¹⁰⁾ 500여명의 무슬림 ‘남자’ 난민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린 것이 문제라면 문제이다. 이들은 한국민의 민족적 정체성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력으로 표상되며, 순수성을 위협하는 침입자로 간주된다. 더군다나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테러의 이미지와 곧잘 연결되는 그들의 종교는 이러한 위협을 가중시킨다.

V. 더 많은 관용을 향한 용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난민을 향해 어떠한 근거로 손을 내밀거나 내칠 것인가? 이렇게 된 이상 어떠한 결론이든 내려야 한다. 우리에게 문제는 던져졌고, 누구도 그로부터 초연할 수 없다. 특히 정치를 고민하는 사람들이나 유권자의 지지를 동원하고자 하는 정당은 던져진 숙제를 해야만 한다.

원내 진보정당인 정의당의 경우 박원석 의원이 두 차례(2015년 원혜영, 이자스민 대표발의) 난민법 개정안에 발의자로 참여한 바 있으나, 그 외에는 난민법과 관련하여 개입한 바가 없다. 사실상 크게 관심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해당 이슈로 가장 뜨거웠던 2018년 초여름 몇 달 동안에도, 법무부에서 청와대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았을 때도 원내 대표적 진보정당인 정의당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논평을 내놓았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¹¹⁾ 조직 노동에 기반하고 있는 진보 정당이 이주 관련 이슈에 침묵하거나

10) 실제 현실의 작동을 고려해보면 이번 예멘 난민 사건에서 보인 일부 과잉 반응은 ‘호들갑’에 가깝다. 다만 그동안 우리 사회가 난민에 무관심했거나 이번 일을 계기로 난민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점은 긍정적이다.

11)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sns를 통해 “난민 500여 명 수용하는 걸 이데올로기와 종교의 잣대로 터부시하는 이 나라는 북한 주민에 대한 포용에도 관심이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2763172> (검색일: 2018. 08. 12.). 중앙일보 조사(2018년 8월 1-2일)에 따르면 정의당 지지자 가운데 이슬람계 난민에 대해 우호적이라는 답변은 45.7%, 적대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8.5%였다. 원내 정당 가운데 이념적 스펙트럼 상 가장 왼쪽에 위치한 정당조차도 이슬람계 난민에 대해서는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체면치레 정도에 머물러 온 것은 오래된 현상이다. 한국 사회의 변화를 위해 초점을 두어야 하는 모순이 계급이나 분단이라는 판단에 따른 귀결일 수도 있겠고, 이주 노동자의 유입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보류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한국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 모두가 공유하는 인식 가운데 하나는 주변보다는 중앙에 집중하는 경향이다. 주변은 부차적이며, 중심의 문제(주요모순)가 해결되면 부차적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한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진보 정당은 난민을 비롯한 이주 관련 이슈에 자신의 입장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난민 수용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한다. 첫째, 난민 신청자를 환대해야 한다거나 인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당위의 논리이다. 바로 이어지는 질문. 과연 당위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물론 모든 인간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타인에게 마땅히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긴 하다. 사실 권리 자체가 타인이 기꺼이 부담하는 의무에 기대고 있기도 하다. 우리가 누리는 대부분의 일상 권리는 나 이외의 다른 사람이 부담하는 의무의 결과이다. 의무는 먼저 인지되어야 하고, 부담하지 않았을 때 양심적, 물리적 제재가 따를 때 실효성이 담보된다. 우리에게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기 집에 숨어든 짐승도 보호하는 미덕도 있고, ‘선한 사마리안 법’처럼 일부 인간적 의무는 법적 최소한의 형태로 강제되기도 한다. 그러나 인간으로서의 도리 내지는 최소한의 법적 의무¹²⁾ 같은 것을 아무리 강조한 들, 이것이 난민을 적대하는 국민감정을 완화하는 데는 별 무소용인 듯하다.

우리가 난민을 맞이하는 것이 바른 행위이고 그래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 가져오는 사례는 한국전쟁의 피난 경험, 당시 피난민에 대한 국제적 지원, 문재인 대통령의 출신, 제주 4.3항쟁 당시 도일 등을 예로 든다. 박경태(2016)는 난민에 대해 “거품을 무는 사람들”에 대해 “불과 60여 년 전에 전쟁으로 난민과 다를 바 없는 수백만의 국내 실향민을 낳았던, 그래서 그 고통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며, “그 고통을 이겨내는 데 국제사회가 큰 도움을 보냈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한다. 경청할 만하고 지당한 말이다. 그러나 그 기억을 떠올리고, 외면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난민 이슈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가질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비합리적 우려와 두려움, 공포를 합리적 논거로 일깨울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착각일지도 모른다.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나 국격을 들기도 하는 모양이다. 즉 난민을 수용하고 허용하는

출처: <https://news.join.com/article/22861426> (검색일: 2018. 08. 12.).

12) 한국은 ‘난민 지위에 관한 협정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난민 신청자를 받아들이고 보호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다.

것이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걸맞다는 것이다. 또 그것이 한국의 국격을 유지하고 선양하는 길이라는 주장도 이어진다. 한류는 한류대로 뿌듯해 하면서도 난민에 대해서는 냉혹하기 그지없는 태도가 정말 모순이고 양립 불가능할까? 인간의 마음은 복잡하고, 늘 비밀관적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우리의 이성은 이 점을 자주 놓친다.

난민에 대한 처우에 있어 당위적 접근에 이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접근은 ‘이익’ 관점의 접근이다. 이러한 관점은 난민뿐만이 아니라 이주민 수용에 대한 일반론이라고도 할 수 있다. 난민을 비롯한 이주민은 우리와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고, 이들이 보는 세계는 우리와 다른 측면이 많다. 문화의 차이에 따른 세계관의 차이는 우리와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문제점에 대한 대안 등에서 다양성을 가져다준다. 인류 사회가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숙제에 대해서도 다원적 접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사회통합의 부담을 안겠지만 다양한 문화의 존재는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에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논리이다. 역사적으로도 이민족에 개방적이었던 국가들이 반대의 경우보다 번성했던 경험이 더 많다. 이주민이 세운 패권 국가, 미국이 그 사례다.¹³⁾ 난민과 관련해서도 2차 세계 대전 당시 유럽의 유대인 절멸을 피해 미국으로 피난을 떠났던 수많은 학자들이 미국이 학문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도 상기될 필요가 있다. 난민 수용은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논리 또한 이익의 관점에 서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유엔난민기구 법무담당관은 “우리가 ‘국제’에만 관심 있고 ‘인권’에는 관심이 없다면, 국제사회도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겠죠.”¹⁴⁾라고 말한다. 이익의 관점이 설득의 논리로서는 나름 효과가 있지만 만약 이익이 없거나 해악이 발생하면 얼마든지 적대와 증오로 전환될 수 있다는 약점을 가진다. 다니까 삼키자고 하는 설득 논리의 이면에는 ‘쓰면 뺏자’라는 한 쌍의 논리가 숨어있다. 이러한 논리로 당장은 설득될 수 있지만 지속력이 약하고, 큰 틀에서 윤리적이지도 않다.

세 번째로는 난민이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을 통찰하고, 구조로부터 ‘배제된 자’ 혹은 ‘소외된 자’로서 그들과 연대하는 방법을 모색하자는 주장이다. 서영표(2016, 81-2)는 “절망할 수 없”으므로 내외부 “난민을 발생시키는 체계를 향한 적대”에 기초한 협력, 소통, 연대를 실천할 것을 제안한다. 서영표는 공유하는 적대를 직시하여, 협력하고 소통하며, 연대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결국은 돌고 돌아 원점이다. 거대 담론에 기댄 대안이 대개 그렇듯 감동은 없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물론 똑 부러진 대안은 없고, 필자에겐 그런 능력도 없다.

13) 필자는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에서 개방을 공격하고, 축소하는 행태, 자국민 중심주의의 부상 등이 서구가 일반적으로 주도하는 세기가 저무는 현상과 맞물려 있다고 평가한다.

14) 출처: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5544.html (검색일: 2018. 08. 04.)

다만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흥분하지 않고 또는 감정의 고조 없이 객관적 절차를 차분히 수행하는 것이다. 난민법, 난민협약 등 국내외 관례와 법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시민사회는 이러한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더 나은 방안을 국가와 함께 고민하고 숙의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은 사회적 합의를 향해 가는 길이기도 하다.

두 번째는 이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학자든, 정치인이든지를 불문하고, 특별히 가시적인 효과가 없어 보일지라도 계속 말하는 것이다. 과거 국가 이전 시기 추장은 권력자가 아니라 단지 '말하는 자'였다. 평소 추장은 혼자 끊임없이 말을 할 뿐이고,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필요할 때 그의 말을 경청하거나 의견을 구하는 식이었다고 한다. 울림이 있을지, 반응이 있을지는 모를 일이다. 그럼에도 '의무로서 말하기'를 묵묵히 수행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인권의 보편성이 국경에 갇혀있듯 우리의 상상 또한 국경에 의해 제한된다. 우리는 좀처럼 국경을 넘어 인간적 연민, 나아가 연대를 확장하지 못한다. 자본은 이미 국경을 넘어선지 오래지만 그나마 자본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해 볼 수 있는 정치는 국경에 갇혀있다. 특히 진보 진영이 그렇다. 진보를 표방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관심은 온통 국내 이슈이고, 그것을 해결하는 도구 또한 국가로 상정된다. 과연 인권과 인류 보편성에 보다 관심을 가지는 진보 진영이 국가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가?



[그림 4] 2015년 9월 터키, 시리아 난민 아일란 쿠르디(Alan Kurdi)의 죽음

입법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차별금지법의 제정이다. 차별금지법은 여러 차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보수 개신교계를 비롯한 보수층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입법에 성공하지 못했다.¹⁵⁾ 소수정당인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 통합진보당의 김재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적도 있다. 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우회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목적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정부는 2018년 8월 확정된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차별금지와 관련된 일부 내용을 포함하였다. ‘계획’이라는 성격상 법적 처벌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국가가 나서 차별 항목(성별, 장애, 인종, 사회적 신분, 성적 지향 등)에 대해 모니터링 하고 관련 정책 입안의 기초 자료로 삼겠다는 방침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점도 중요 진전이다.

난민 심사가 엄격하고 까다로운 이유는 체류기간 연장과 노동을 위해, 혹은 단순 이주나 도피를 위해 허위로 난민을 신청하는 사람들, 소위 ‘가짜 난민’을 골라내자는 의도이다. 현실적으로 모든 난민 신청자를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고, 난민 인정 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지 않을 것이기에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여기까지는 좋다. 그렇다면 왜 한국의 난민 인정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지, 거기에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도가 개입되었다면 공정한 절차보다는 국익이나 국민감정을 우선하여 절차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에 대한 의문에 답해야 한다. 우리는 법에 따른 절차가 심리 대상자를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당연히 기대한다. 우리가 전임 정부에서 있었던 사범농단에 분개하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공정성을 훼손했기 때문이다. 난민 인정 절차 또한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답답한 현실이지만 이 글 또한 그럴듯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할 수 있는 말은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사회가 그동안 고민해보지 못한 주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그때그때 요구되는 정책을 실천하면서 시행착오를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과정은 지난하겠지만 조금씩 밀고 나가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한 사람의 수준은 그/녀가 자기보다 약자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보면 알 수 있듯,

15) 현재까지 차별금지법은 2007년 정부 제안 이래로 2013년까지 총 6번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와 철회로 모두 입법화에 실패했다. 가장 많은 의원(51명)이 제안자로 참여한 김한길 의원 대표 발의안(2013. 02. 12.)에는 차별 요소를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性的指向), 성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으로 규정하고, 차별행위를 “성별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에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특정 개인 및 집단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괴롭힘 행위 및 차별의 표시·조장 광고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동 법안은 2013년 4월 24일 대표 발의자에 의해 철회되었다.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한 사회의 수준은 그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보고 가늠해 보면 크게 틀리지 않다. 과학적 검증을 통과한 가정은 아니지만 우리의 경험치가 말해주는 증거이다. 난민에 대한 격렬한 논쟁은 단지 난민 수용 여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에 존재하는 소수자 내지는 약자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그것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사회를 만들고 싶어 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경제)발전을 최고의 가치로 달려왔다. 다른 가치들에 대해 돌아볼 여력은 크지 않았다. 여성인권이나 성소수자, 이주민 등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커진 것은 근래이다. 앞으로 나아가면서도 주위도 둘러보고, 더디더라도 엮어진 사람은 일으켜주며 나아가야 한다. 비록 비틀거릴지라도 그렇게 한발 한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답을 내야 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혐오감의 폭발에 대해 과학적 사고를 통해 냉정하고 정확한 진단을 하면서도 감성적이면서도 이해에 기반을 둔 접근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혐오의 비합리성을 비난하거나 근거 없음을 지적한다고 혐오를 버리지 않는다. 세상일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작동하는 것만은 아니다. 원인은 정확히 짚어내면서도 다수가 공유하는 적대 감정을 배려하는 발화와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타협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한 그러한 의견을 배려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성으로 분석한다고 현실이 변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자는 언제나 존재하고 그것은 상수이다. 염두에 둘 일이다.



- 김나미. ‘여성인권’의 이름으로 맺는 ‘위험한 연대’-예멘 난민수용반대 청원과 이슬라모포비아. 제3시대 134, 2-5.
- 난민인권센터. 2017. 2018 난민인권센터 통계자료집.
- 남옥정. 2015. GCC 중재안에 따른 예멘 권력이양과정과 지속적 불안정 요인 연구. 한국이슬람학회논총 25, 33-58.
- 박경태. 2016. 한국사회와 난민. 문화과학 88, 47-65.
- 박권일. 2018. 06. 25. 좌절한 대중이 찾은 상상의 적. 한겨레21.
출처: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5543.html (검색일: 2018. 08. 07.).
- 박영아. 2015. 우리나라 난민인정체계의 현황과 쟁점. 월간 복지동향 204, 11-18.
- 박현도. 2018. ‘제주 난민’ 사태 불러온 예멘은 어떤 나라인가. 월간조선 뉴스룸.
- 로랑 본푸아, 예멘전쟁, 무엇을 위한 것인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제91호(2016년 4월호).
- 서영표. 2016. 난민을 관리하는 정치 또는 난민에 의한 ‘난민정치’. 문화과학 88, 66-84.
- 이용승. 2016. 북한이탈주민 통합,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민족연구 66, 4-23.
- Jacobsen, K. 1996. Factors influencing the policy responses of host governments to mass refugee influx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0(3), 655-678.
- Lipka, M. 2017. Muslims and Islam: Key findings in the U.S. and around the world. Pew Research Center. 출처: <https://pewrsr.ch/2vE76ku> (검색일: 2018. 08. 12.).
- UNHCR. 2018. Global Trends: Forced displacement in 2017.
출처: <http://www.unhcr.org/5b27be547.pdf> (검색일: 2018. 08. 05.).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bill/main.do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난민인권센터 <http://nancen.org/>
- 노동자연대 <https://wspaper.org/>
- 서울신문 www.seoul.co.kr

- 알자지라 www.aljazeera.com
- 중앙일보 <https://joongang.joins.com/>
- 청와대 www.president.go.kr/
- 한겨레21 <http://h21.hani.co.kr/>
- PEW Research Center www.pewresearch.org